

# 생태전환과 노동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EU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 합의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였다.<sup>1)</sup>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가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생 에너지, 청정 차량, 저탄소 제조업 민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 산업국가는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생태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제조업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갈등을 촉발한다. 예컨대, 오늘날 전기차 생산의 확대로 대표되는 e-모빌리티로의 전환은 기업의 제품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생산직 일자리의 감소를 낳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공급업체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더불어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마찬가지로 생태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위험을 떠안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 예컨대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비용을 고

1) 이해경(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국회입법조사처.

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와 이들의 지역사회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요구한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은 생태전환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노동운동 대응을 다룬다.<sup>2)</sup> 우선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을 분석한 클라우스 되레는 비교 작업장 사례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과 사업장평의회가 생태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한다. 그는 독일의 노동운동 진영이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교육훈련 기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국가의 산업정책 혹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태전환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리더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노조전략 및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미국의 생태전환과 노동운동의 대응을 분석한 차미진은 연방정부 차원의 생태전환 전략과 주정부 기반의 기후-노동운동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의 주정부는 대체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집행할 예산이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대 뉴욕주를 시작으로 기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운동 연대체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친노동, 친기후 정책의제 개발과 기후 일자리 운동을 통해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주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관련 입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차 전환에 대한 미국의 기후일자리 운동 실험과 독일의 금속노조 대응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생태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는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탄소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운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민주적 참여와 산업정책, 기후정책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전환 과정에서 노

2) 지난 2년 동안 국제노동브리프 기획특집에서는 생태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여러 연구 성과를 다루었다. 2021년 9월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그린뉴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2021년 3월호와 2022년 6월호에서는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주요국 전기차 전환에 관한 사례 연구를 소개하였다.

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조업 혹은 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기후운동의 목표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운동 역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조합의 사회 생태적 전환 전략은 기후 정의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해결하는 권력 관계의 재편이 중요하다.<sup>3)</sup>

기획특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편의 글이 생태전환에 관한 북미 및 유럽의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논쟁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태전환과 노동운동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KLI**

3)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편의 글은 기존 경제체제의 구조 개혁과 노조의 민주적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조 개혁” 접근 혹은 노동조합의 “변혁적-사회 생태적 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이정희(2022),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기후 위기와 일의 세계』, 한국노동연구원, pp.133~171을 참조할 것.